

긴·급·진·단

# 약진하는 노동조합



공병호 박사

### ▲ 집단의 권력화를 불어하라

인간이란 본래 협력하는 본능도 있지만, 약탈하는 본능도 있다. 시장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본가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도 비슷할 것이다. 보편적인 인간성이라는 면에서 보면 자본가 역시 근로자들을 약탈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인간성을 보완하기 위해 노동 3법이 만들어지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안들이 마련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근로자들은 100년 전의 근로자들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시장이 발달해 일방적인 보호의 대상에 머물지 않아도 될만큼 직업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일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이상적인 노동조합의 형태를 기업별 노조라고 생각한다.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이 그다지 미덥지 않다면, 노동조합의 범위는 기업별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그 수준 정도면 기업가와 노동조합의 힘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힘을 빌려 해결하고 싶어하는 근로환경과 후생복지의 개선에 합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조를 넘어서 산업별 노조로 변모해 왔으며, 지금은 산업별 노조를 넘어 최상급 기관이 최상위 노동조합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앞으로 이런 추세를 막기는 힘들 것이다. 게다가 정당 결성에 성공하고, 최근에는 상급 노동단체장들이 원내 진출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간 권력의

균형추는 노동계 쪽으로 현저하게 기울고 있다.

향후 10년간 최상위 노동단체의 파워는 지금보다 더욱 위력을 발휘하게 될 듯하다. 더욱 정치적인 조직으로 변모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공무원과 교원 노조의 정치 참여 등 결국은 원하는 바를 성취할 것이다.

아무리 선의를 갖고 출발했다 하더라도 일단 사람들이 모이면 그 단체는 자체의 발전 논리를 갖추게 된다.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노동조합이라고 해도 책임져야 할 범위가 확대되면 될수록 조직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조직으로 변모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비단 노동단체뿐 아니다. 신문사건, 각종 재단이건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초기의 설립 취지란, 세월과 함께 무력화 될 가능성을 늘 갖고 있다.

한국의 노동조합도 상급단체에



권력이 집중되면서, 상급단체를 잠약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의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 더욱이 노동조합은 사회적 약자라 간주되는 근로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 때문에 알게 모르게 보통 사람들의 심정적인 동조를 받고 있다. 이런 배경을 십분 활용하여 노동조합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내는 데 가일층 노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상급단체를 이끄는 사람들은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더욱더 선명한 노선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선명하면 할수록 이후의 행로도 탄탄대로를 걷게 될 것이다.

사용자들이나 사용자들을 옹호하는 단체들이 처음에는 무척 반발하겠지만, 정치세력화된 상급노동단체와 그를 지원하는 세력들 때문에 무척 어려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기 전까지는 상급

노동단체의 성장을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조직이란 설립 취지에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노동조합 역시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광의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노동조합은 정치, 사회, 경제의 개혁을 원하는 단체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상급 노동단체들은 이미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조직의 변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익을 추구하는 권력 기관으로 변질된다는 말이다.

피터 드러커 교수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특정 단체가 자신의 사명을 광의로 해석하고 그에 따라 운용하기 시작한다면 사회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 우려한 바 있다. 그는 그 영향력이 자유에 대한 침해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

라고 예고한다.

오직 다음과 같은 다원 사회에서만 자유를 보장하는 믿을 만한 안전망이 존재한다. 각각의 기관이 자신의 과제와 사명에 자신을 제한하는 다원 사회 말이다. 각각의 기관이 자신의 과제에 집중한다는 것은 경영 관리적 요구이자 사회적 요구이고, 정치적 요구이기도 하다. 어느 한 기관이 자신의 좁은 영역을 넘어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지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시도라 해도 권리의 침해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 의도는 좋지도 모른다. 단기적으로 그것은 사회의 이익으로 나타날지도 모른다. 정말이지 그것은 긴박한 과제를 처리하는, 그리고 잘 수행하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 사회와는 양립할 수 없다. 그것은 자유에 대한 위협이다.

정말 한국인들이 새겨들어야 할 경고이다. 한 조직이 설립 취지를 벗어나 야심을 갖게 될 때, 사회가 유지해야 할 자유 자체를 침해하는 형태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드러켜 교수는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다시 한번 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 보자.

조직으로 구성된 다원 사회는, 그 원칙이 정반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조직은 그 법적 지위가 소유권이 무엇이든 특수 목적의 도구다. 오직 그 행동이 그 특수 목적의 수행에 필수적인 경우에만, 그 조직은 합법적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조직의 행동들은 무효다. 형태가 아니라 기능이 한 조직의 적법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 ▲ 목적을 벗어나는 순간 위험해진다

근로자 권익 보호라는 명분으로 노동조합은 정치, 경제, 사회의 개혁에 대해 더욱 공세적으로 압박해 올 것이다. 한때 한 상급 노동단체는 단체협약에서

사용자 측에 '조국 통일에 기여할 것'을 요구한적이 있다. 모범 조합원의 방북 경비 지원과 연간 일정한 통일교육시간 확보, 통일 기금 마련, 북한 노동자 초청 기술 교류 등을 제시했다. 그 단체는 '민족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조국 통일의 과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사용자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기사에 대해 한 언론인은 이렇게 논평했다.

올해 단체협상을 앞두고 대기업 노조가 사용자 측에 요구한 사항을 보면 이해가 안 된다. 모상급 노동단체는 사용자 측에 '통일 기여 조항'을 신설하고 모범 조합원의 방북 경비를 지원할 것을 요구기로 했다. 산하 4개 노조는 한술 더 떠 비정규직 근로자문제 해결 등을 위해 회사별로 순이익의 5%를 거둬 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기업은 최악의 내수 부진을 겪고 있는데 노조가 기업 이익의 분배라는 경영권에 간섭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해당 노동단체는 기업이 통일

운동에 참여해야 한다며 조합원의 방북 경비, 통일 기금, 북한 노동자 초청 경비 등을 내라고 요구했다. 이제 노조가 통일운동 선봉장이 될 모양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회사엘 다니는가. 통일운동 하는 시민단체 운동원이 되면 되지 않는가. 좋은 상품 만들어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을 재투자해 고용을 늘리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임무이다. 노조는 그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를 놓고 사용자와 협의하는 기구다.

노조가 근로 조건과 무관한 정치적 요구나 경영 간섭을 하는 것은 숫자의 힘을 빌려 모든 문제를 밀어붙이자는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해당 단체가 '탄핵 가결 규탄'을 이유로 매주 수요일 산하 사업장별로 잔업 거부 투쟁에 돌입해 기업 경영에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것도 말 안 된다. 제발 자기 영역에서 자기 할 일이나 열심히 하라. 정치운동, 통일운동을 하고 싶으면 아예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

《중앙일보》 2004.3.24

정치세력화에 이미 성공한 상급 노동단체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노동 관련 입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사용자들을 압박 할 것이다. 거대 정치산업의 경영자들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일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며, 신규 대형 투자를 통해 비즈니스를 활성화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사업가에 미치는 효과만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역사의 시계를 되돌려,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20세기에 겪었던 대부분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일찍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위대한 자유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는 대작 『자유론』에서 점증하는 노동조합의 특권에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점점 더 노동조합은 합법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집단, 그리고 동등한 권리를 가진 경쟁적인 이해 세력들에 의해 견제되어야 할 집단이 아니라, 공공선을 위해서 모든 노동의 배타적이고 포괄적인 조직화

라는 그들의 목적이 반드시 지지 받아야 하는 집단으로 간주되었다.

비록 최근에 노동조합의 권력 남용이 여론에 충격을 주고 무비판적인 친 노동조합 정서가 쇠퇴하고는 있지만, 대중들은 현재의 법률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고, 우리 자유 사회의 모든 기초가 노동조합이 남용하고 있는 권력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권력은 강화될 것이며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임금 격차는 날로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어떤 형식으로든 근로자의 경영 참여가 이루어질 텐데, 그 단계에 이르면 한국에서의 기업 경영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이다. 자신의 논리를 고수하는 노동조합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는 시기는 한국 경제의 쇠퇴와 맞물릴 것이며, 그 시기는 약 10년 뒤가 될 것이다.

게다가 노동조합의 특권이 허용되는 만큼, 다른 단체들에게

서 같은 수준의 특권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것이다. 피터 프러커교수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하게 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다윈 사회의 한 집단에게, 예컨대 정부기관에게 부여한 권력을 결국 다른 모든 집단도 틀림없이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다시금 배워야만 할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정부 기관과 대학, 또는 정치적으로 흔히 말하는 '바람직한 조직'을 포함해 어떤 집단에게도 권력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조직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도구들로, 각각은 구체적 목적 수행을 하기 위해 '좋은' 존재이지, 그 목적을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위협으로 돌변한다. ●